

2023 국가기록백서

# 제 1 장 총 론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3 국가기록백서

# 제 1 장 총 론

National Archives of Korea White Paper 2023

## 국가기록관리 체계 개선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3년 국가기록원은 <표 1-1>과 같이 4개 영역 28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1-1] 2023년 국가기록원 주요 추진 업무

| 영역                        | 세부 과제                          | 담당 부서   |
|---------------------------|--------------------------------|---------|
| 기록물의<br>효율적 관리<br>기반 구축   | 기록관리 표준 정비 및 제·개정              | 정책기획과   |
|                           | 기록물 평가 및 분류체계 개선               | 기록관리정책과 |
|                           |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 구축                 | 디지털혁신과  |
|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 구축          | 기록관리정책과 |
|                           | 기록물 보존환경 인프라 구축 및 관리           | 보존관리과   |
|                           | 동종·대량 기록물 수집 기반 마련             | 사회기록과   |
| 기록물의<br>체계적 수집 및<br>보존 강화 |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수집 및 관리             | 기록관리정책과 |
|                           | 중앙행정기관 기능분석                    | 사회기록과   |
|                           |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통합인수               | 사회기록과   |
|                           | 한시(폐지)기관 기록물 수집 및 관리           | 경제기록과   |
|                           | 민간·해외기록물 수집 및 관리               | 특수기록과   |
|                           | 국가기록물(종이·전자·특수유형) 정리사업         | 사회기록과   |
|                           | 기록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 보존관리과   |
|                           | 기록물 상태검사 및 디지털화 확대             | 복원관리과   |
|                           | 시청각기록물 및 전자매체 보존처리             | 복원관리과   |
|                           | 종이기록물 복원·복제처리                  | 복원관리과   |
| 국민 친화적<br>기록정보서비스<br>제공   |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체계화               | 서비스정책과  |
|                           | 소장기록물 검색 및 포털 기능개선             | 서비스정책과  |
|                           | 국민 참여형 기록문화 확산 및 디지털 기록 콘텐츠 개발 | 서비스정책과  |
|                           | 일제 강제동원 관련 기록화 사업              | 서비스정책과  |
|                           | 이용자 맞춤형 기록정보 열람서비스 정착          | 나라기록관   |
| 국가기록원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개최      | 서비스정책과                         |         |

| 영역                   | 세부 과제                  | 담당 부서                               |
|----------------------|------------------------|-------------------------------------|
| 국내·외 기록관리 지원 및 협력 확대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운영 활성화 지원 | 기록협력과                               |
|                      | 민간기록 활성화 및 진흥정책        | 기록협력과                               |
|                      | 국내 기록관리 교육 운영          | 기록관리교육센터                            |
|                      | 국제 기록관리 교육 운영          | 기록관리교육센터                            |
|                      | 기록관리 국제협력 사업           | 기록협력과                               |
|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 기록협력과<br>정책기획과<br>기록관리정책과<br>서비스정책과 |

## 1.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이 효율적·통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공공표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등 6개의 표준을 폐지하고 일반고시로 전환하였으며,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등 2개 표준을 개정하였다.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고자 “표준화 점검단”을 구성하여 제·개정 이후 3년이 경과 된 공공표준을 대상으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의 기록관리 실무경험자 중심으로 “표준화 실무단”을 구성하여 표준안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게 운영하였다.

이에 더해 「중앙행정기관 고유업무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의 보강 개정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서식(안)을 적용한 시범준칙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단위과제를 정비하여 기관의 주요 기록물 선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범국가적 디지털 전환 확산 기조에 맞추어 디지털 기록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의 이점을 활용하여 온나라 문서 시스템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3단계(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관) 이관 체계가 2단계(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관)로 전환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플랫폼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되었다.

## 2.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보존 강화

### 가. 주요 기록물의 능동적 수집 추진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을 위해 2023년 공공기록물 수집계획을 기반으로 전자기록물 456만여 건과 비전자기록물 11만 7천 철을 수집하여 안전한 보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능동적인 수집·관리 체계로의 개선을 위해 2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능분석을 실시하여 중요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기록물의 인수 완료율을 높이고자 통합인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자기록물의 상태검수 결과를 이관 기관에 통보하고 재이관 또는 조치불가 처리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인수 완료를 추진하였으며,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기관 지원에 힘썼다.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드문 한시(폐지)기관 기록물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의를 적극 추진하였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3개 기관의 기록물을 이관받았으며, 각 기관들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록관리 컨설팅을 총 12회 실시하였다.

이에 더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중요 민간·해외기록물의 수집·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총 19건의 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기증과 공개구입을 통해 민간기록물 2천여 점을 수집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해외기록물 수집을 위해 해외기록 조사위원 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였고, 그 결과 한국 관련 주요 기록물 3만여 건을 수집할 수 있었다.

### 나.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체계 마련

국가기록원은 각급 기관에서 이관받거나 수집한 방대한 양의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기록물 정리사업을 통해 종이기록물 10.6만 철, 특수유형기록물 1만 철을 정리·등록하였으며, 전자기록물 376만건을 검수하였다.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검토회를 통해 중간 산출물을 공유하여 일관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다.

정리된 기록물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해충·유해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록물 손상을 예방하였으며, 종이기록물의 보존수명을 늘리기 위해 8천여 철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탈산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에 더해 기록매체 특성에 따른 상태검사 중장기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종이, 시청각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상태검사하여 보존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종이기록물 2.7만여 점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 완료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광학문자인식기술(OCR)을 적용하여 1.5만권을 데이터화함으로써 기록물을 이중보존하고 활용성을 강화시켰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훼손된 중요기록물에 대해 적절한 복원처리를 실시하였다. 지난 2020년 수립된 중장기 복원·복제 계획을 기반으로 2023년에는 7천여 매를 복원처리 하였으며, 복원처리 방식을 기록물의 중요도, 활용도, 훼손도를 평가하여 차등 적용하는 ‘아카이브식 복원처리 실무모형’을 개발하여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처리량을 늘렸다. 국가기록원은 소장 기록물 외에도 공공·민간기관 소장 기록물의 복원·복제처리를 지원하였다. 단국대학교 소장 한미교류 관련 기록물 등 7개 기관 기록물의 복원·복제처리를 지원하였으며, 각급기관의 재난 피해 기록물 응급복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 피해 기록물 응급복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맞춤형 응급복구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 3. 국민 친화적 기록정보서비스 강화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의 적극적 공개와 기록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기획성 공개재분류를 실시하였다. 2023년에는 3회 개최된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292만여 건을 재분류하였다. 또한, 일관성 있는 열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람정책을 서비스정책과로 이관하여 기록정보센터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2023년의 열람처리 건수는 64만여 건으로, 재산·신분 등 증빙기록, 학술열람, 시사·보도 등 다양한 분야의 청구가 있었다.

국민이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창구인 국가기록포털에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기록물 검색 가이드’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는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한 주제형 기술서로, 한미동맹, 재외동포, 세계박람회 대상 주제로 선정하여 구현하였다. 또한, 열람빈도가 높은 국무회의록의 건 단위 세부 관리정보를 입력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검색·활용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썼다.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과 연계하여 기록사랑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온라인 서포터즈 ‘나라기록넷띠’를 운영하여 기록관리 정책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국민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소장기록물을 활용하여 동영상 콘텐츠 ‘언박싱 아카이브’를 신규 개발하였다. 2023년 ‘언박싱 아카이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총 3회를 기획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기록에 담긴 이야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국민에게 제공되었다.

이외에도 국민이 기록을 더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기획·특별전시를 기획하여 개최하였다. 정부의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신청을 계기로 기획전시를 개최하였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워싱턴 D.C.부터 인천까지 총 6회의 국내외 특별 순회전을 개최하였다

#### 4. 국내·외 기록관리 지원 및 협력 확대

국가기록원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확산을 위해 실무협의회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민간기록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단위 권역별로 개최되는 지역별 간담회와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민간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기록관리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튀르키예, 페루와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로코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역량강화 사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기록관리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자 국제기록관리포럼을 개최하고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기록관리 선도국가로서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외 기록관리 분야 교육과정을 전년 대비 확대 운영하여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했다.

아울러 국가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임기가 만료된 3개 위원회(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아카이브위원회, 기록관전문위원회)의 개편을 추진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번 개편은 현재 국가기록원의 각 부(기록정책부, 기록관리부, 기록서비스부)의 업무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기록정책전문위원회, 기록관리전문위원회,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로 이루어졌다. 2023년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총 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각 전문위원회는 3차례씩 회의를 개최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였다.